



①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초청 조국 대표 특별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②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탄핵다방 4호점(전주 풍남문광장점)' 개점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하고 있다.



“상임위 의결 농업 민생 4법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농민께 한줄기 희망 되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실에서 ‘농업 민생 4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 이삭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으로는 어기구·이원택·문규주·문대립·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효선·주철현 의원으로 총 11명이다.

이원택 의원은 “250만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쌀값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쌀 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며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쌀값 정상화를 위한 압박을 더 이상 늦출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방지하고, 장비구입 불가 상응으로 힘겨운 소비자를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했다”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규정하며,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심각한 이삭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민생 4법은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법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민생을 보듬고 민생을 살피야 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서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농업 민생 4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생비 급등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법’과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지원법’의 심사 및 의결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 반드시 끝내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 4번째 ‘탄핵다방’ 서尹 비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전북대 강연서 “尹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 회복… 사회권 선진국 만들겠다”

지난 22일 전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탄핵은 쉽지 않지만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5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국 4번째 ‘탄핵다방’을 열었다.

이날 열린 탄핵다방에서 조국 대표는 “전주에 오니 윤석열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뽐낸 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세 차례 복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탄핵다방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하며 탄핵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이 무속과 역술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무당과 역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

년 반 동안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검찰 동원 외에 한 게 없다”며 창당 초기 구호였던 “3년은 너무 길다”를 “3개월도 길다”로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윤 대통령 탄핵추진안을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물론 탄핵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질기게 기다리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친 조 대표는 탄핵다방 차량 위로 올라 시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장외투쟁이다. 탄핵다방은 지난 2일 대구에서 시작해 전남 무안, 서울 여의도를 거쳤다.

이날 전주에서 열린 탄핵다방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조국 대표는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이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철도가 무상교육과 보육 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철레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감찰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연 후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정정당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먼저, 서향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정읍시로부터 1조1,588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 정읍시상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이어, 고경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정읍-신계동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문’과 고성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를 끝마쳤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며,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 계약 파기 고려해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안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 용역 전면 재검토”도

부안군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356회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청도)에서 부안과 인연을 잇는 크루즈기항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추진된 격포항을 환황해권 해양관광허브를 조성함으로써 공항 마리나항만 연계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아직도 아무 성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네오넥스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뤄지고는 하나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부안변산면대항리 관광휴양시설인 켈린지테마파크를 진행해오는데 자금흐름이 어려워져 A사가 중단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안군은 민자유치 1조4,000억원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지 부안마실길1코스를 잃어가면서까지 휴양시설자리를 내줬는데도 아직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VR·AR 리조트조성 또한 지금 진행되는것도 없어 부안군이 제대로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안군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356회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했다. (사진=부안군의회 제공)

질타했다. 이에 새만금도시과장은 지금 자금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진행 중인 국화전시회와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억3,000만원을 들여 가을국화전시회를 펼쳤는데 해탈마루에 놓여진 꽃들이 아주형편 없고 예산낭비였으며, 군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 소장은 다른시·군보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 용역에서 개발된 캐릭터가

정체성과 상징성은 물론 차별성이 없다며 전면 재검토와 해양수산과 수산물특산물 온라인홍보로 군비 3,000만 원 비용을 들여 하는 일이 농촌활력화 로컬푸드 이커머스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판매에 중복됐 진행되는 부분을 업무협의를 통해 농촌활력화에서 하게 효과적이지 않겠다는 방향제시도 이어졌다.

이번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앞으로 부안군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개선이 되고 추진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단속 체계화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



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

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해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자영업자에 육아·출산 급여 지급되나?

국힘 조배숙 의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22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에는 배제되어 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로 국한돼 있으며, 이외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한해서만 특별규정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준비 철저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준영)가 22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손준영 위원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으며, 오창수 부위원장은 용역 발주 시 주의 계약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인 만큼 신중을 당부했으며, 김갑수 의원은 황진 장관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동환 위원장은 관내 어려운 소상공

인들을 지원해 줄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김정현 의원은 생활인구 활성화 개선 대책과 남원아트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진익 의원은 승사교 및 꽃밭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차공간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미선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전문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원=김기우 기자